

□ 남북 경협 활성화의 선결 조건

1. 2005년 회고 : 경협 확대 속에 제도화 미흡

○ 상업적 거래 증가와 남북 관계 회복에 따른 지원성 물자 증가 등으로 8월말 현재 전년 동기비 59.7%의 높은 신장세를 기록함

- 급성장세 기록 : 남북 양측의 실리주의적 접근 자세와 남북 관계 회복에 따른 지원성 물품의 반출 증가 등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
- 남북 양측은 경협 문제를 북핵 및 남북간의 정치·군사적 문제와 다소 분리 대응하는 실리주의적 자세를 보여왔을 뿐 아니라, 최근에는 남북 관계 회복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따른 비료 지원 등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음
- 이로써 2005년 1~8월중 남북 교역은 전년 동기간의 4억 3,300만 달러보다 59.7%나 늘어난 6억 9,15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
- 상업적 거래의 높은 증가세 : 개성공단 개발 및 금강산 관광 사업의 확대에 따른 관련 교역의 증가로 상업적 거래가 79.1%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함
- 개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과 관련한 반출이 전체 반출의 34.9%를 차지했으며, 이로 인해 상업적 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6.0%나 증가하였음
- 특히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, 부지 조성 및 공장 건설 및 시범공단의 본격 가동으로 건설 중장비와 기계류, 원부자재 등의 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배

< 거래 유형별 남북 경협 추이 >

(단위 : 100만 달러)

| | 상업적 거래 | | | | 비상업적 거래 | 합계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| 일반교역 | 위탁교역 | 경제협력 | 소계 | | |
| 2003 | 223.7 | 185.0 | 21.0 | 429.7 | 294.4 | 724.2 |
| 2004 | 171.8 | 176.0 | 88.7 | 436.5 | 260.5 | 697.0 |
| 2005.1~8 | 133.5 | 122.9 | 182.2 | 438.5 | 253.0 | 691.5 |
| (증가율) | 24.0% | 22.8% | 390.4% | 79.1% | 34.4% | 59.7% |

주 : 1) 상업적 거래의 경제협력은 개성공단사업, 금강산관광사업, 기타 경협사업을 의미하고, 비상업적 거래는 정부·민간 지원과 사회·문화 협력사업, 경수로 건설과 KEDO 중유 제공 등을 포함함

2) ()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
나 늘어났으며, 전체 반출의 10대 품목 중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 비중이 57.5%를 차지함

- 반입은 아연과 모래 등의 광산물을 비롯하여, 개성공단 생산품의 신규 반입과 위탁가공 의류 등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32.0% 늘어났음
- 이로써 남북 경협은 전체 교역 업체 및 품목의 수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.1%, 24.7%로 늘어났음

○ 전반적인 경협의 제도화 진전 속에 불안정한 부문은 여전히 남아있으며, 비상업적 거래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

- **경협의 제도화 미흡** :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의 12개항 합의와 후속 실무회담 개최, 9개 경협합의서 발효 등으로 대북 투자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크게 해소되었음

- 그러나, 특정 기업인 퇴출로 인한 현대아산 경협 사업의 축소 및 지연 등은 남북 경협 제도화의 미흡한 현실을 방증하고 있음

- **여전히 높은 비상업적 거래 비중** : 상업적 거래의 높은 증가율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동기간의 43.5%에서 36.6%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음

- 특히 2005년 1~8월까지 쌀과 비료를 비롯한 대북 지원이 34.6% 늘어났음

2. 2006년 남북 경협 전망

○ **경협 인프라 개선과 개성공단 사업의 본격화 등으로 확대될 전망**이나, 경제 외적 불안 요인 등은 본격적인 경협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

- **경협 여건 개선** : 인프라 확충과 법적·제도적 측면의 개선, 남북 관계의 회복 등으로 남북 경협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

- 전력과 통신, 경의선 도로·철도 연결 등의 SOC 확충과 함께,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남북경협 사무소 개설과 통행·통관 절차 개선 등에 합의
- 6자 공동성명의 채택(9. 19)으로 남북 경협에 대한 정치권의 긍정적인 변화와 남북협력기금의 증액 등 이전보다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기대됨

- **경협 사업 본격화** : 개성공단의 본격 가동과 관광 지구의 확대 등으로 상업적 거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 - 개성공단 시범단지의 본격 가동과 1차 본단지의 공장 건설, 2단계 150만 평의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,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공사 등이 기대됨
 - 현대와 북측간의 오해로 다소 지연될 수는 있으나, 금강산 및 개성·백두산 지구로의 관광 확대와 남북경협추진위에서의 상호 보완적 경협 사업 추진 합의로 사업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
- **북핵 합의 이행이 관건** : 남북 관계 회복과 6자 공동성명 채택에도 불구하고, 북미간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와 불신의 존재로 본격화에는 한계가 있음
 - 6자 공동성명은 북핵 해결 원칙에 대한 합의일 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질적 이행을 위한 합의 도출과 이행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됨
 - 즉, 경수로 제공 시기와 NPT 복귀 및 IAEA 사찰 시기의 先後 문제, 경수로 건설 주체와 비용 분담, 핵 사찰 수용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
 - 따라서 단기간 내에 정부의 '중대 제안' 계획 추진과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의 본격적인 경협 활성화 단계로 발전되기까지는 한계가 존재함
 - 그러나 북핵 문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경우에는 에너지·물류·통신망 등의 SOC 부문을 비롯하여, 경공업과 농림수산업, 지하자원 개발 부문 등의 대규모 경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

< 2006년 남북 경협 환경 전망 >

| 기회 요인 | 위협 요인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성공단 개발 사업의 본격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범공단 및 1차 본공단 가동 - 경협 인프라와 법·제도적 여건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력, 통신, 도로·철도 연결 등 - 관광 사업 확대 (금강산, 개성, 백두산) - 남북협력기금 증액 (5,000억 원 → 6,500억 원) - 북핵 진전으로 전향적 정책 변화 기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의 상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북핵 문제 미해결 - 남북 경협의 제도화 미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현대와 북측의 오해 존재 |

- **경협 재원 부족** : 남북 관계 개선과 경협 확대로 남북협력기금 수요 증대가 예상되나, 세수 부족과 갑작스런 국민 부담으로 대규모 재원 조달에는 한계
 - 정부는 대북 직접 송전의 중대 제안을 비롯한 중유 제공과 경수로 건설을 위해 향후 10여 년간 총 6조 5,000억 원~1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

3. 남북 경협 활성화의 과제

-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의 해소는 물론, 기합의 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제도화, 남북경협기금 확충 등이 요구됨

- **북핵 합의 이행** :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조화 속에, 단계적·동시 이행 원칙을 통한 북미간의 불신 해소와 신뢰 형성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함
 - 이를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공조 하에, 남북 당국간 회담과 한중 고위급 접촉 등의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 설득에 주력해야 할 것임
 - 또한 6자회담 타결에 따른 긍정적 여론으로 정부 정책의 운신 폭이 넓어진 만큼,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
- **전략물자 반출 규정의 신축적 운영** : 개성공단 개발 사업의 취지와 중요성, 반출 물자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제시 등을 통해 교육용 및 산업용에 한해서는 허용되도록 주변국을 설득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다해야 함
 - 반출 물자의 최종 사용처가 남한 기업인 점과 개발의 관리권이 남한 기업에 있어 사후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한 점 등을 충분히 이해시켜, KEDO의 경수로 사업 선례가 준용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임
 - 북측은 이미 바세나르협약 미가입국인 중국이나 동구권을 통해 대부분의 전략물자를 조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, 반출물자에 대해서는 미국에게 무선자동인식(RFID :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) 칩 부착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음을 설득시킴

- **경협 의 제도화 진전** : 경협 인프라 확충과 법적·제도적 합의의 실질적 이행과 준수, 통행·통관의 절차 간소화, 남북회담의 정례화 등을 통해 남북 관계 및 경협의 제도화를 더욱 발전시켜야 함
 - 남북간 기합의 사항이 어느 한 쪽의 돌발 변수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, 남한 내부 기업간의 과당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합의 사항의 존중 및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시스템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
 - 적극적인 외국인 기업 유치로 사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함
 - 남북 관계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회담의 주요 안건을 경협 분야뿐 아니라 정치·군사적인 분야로 확대시켜야 할 것임

- **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노무관리** : 북측 인력의 고용 확대와 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인력 공급 계획과 협력적 노사 문화 정착 방안을 강구
 - 개성공단의 본격 가동으로 북측 인력의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북측 노동력에 대한 기술 연수와 안전 교육 확대는 물론, 남북간의 의식 및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소양 교육 등의 노무관리 교육이 필요함
 - 다만, 정부 주도의 교육에는 북측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산·학·연 협동체제(가칭 '통일경제 아카데미' 운영) 하에 정부의 측면 지원 방식이 바람직할 것임

- **경협 재원 확충 방안 마련** : 중장기 대북 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시중 부동산 자금의 '북한개발자금화' 및 '통일기금화'를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함
 -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사모펀드 조성이나 일정 규모에 한해 자금 출처를 면제해주는 중장기 저리의 국공채 발행 등을 검토해볼 만함
 -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북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대북 지원의 합목적성에 대한 對국민 설득 방안을 강구해야 함

홍순직 수석연구위원 (3669-4182, sjhong@hri.co.kr)